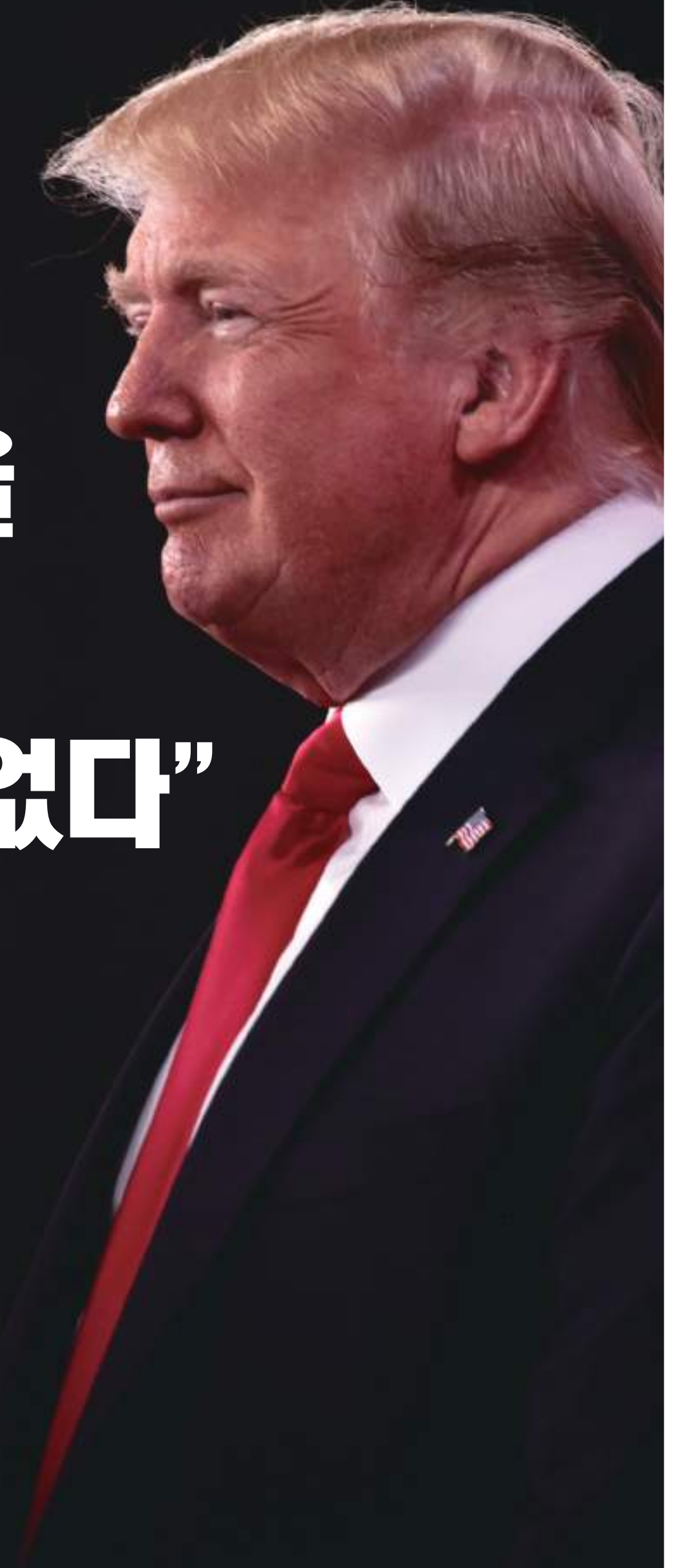


남·북/북·미 정상회담

“미국은 조약을 단 한 번도 지킨 사례가 없다”

— 고故 리영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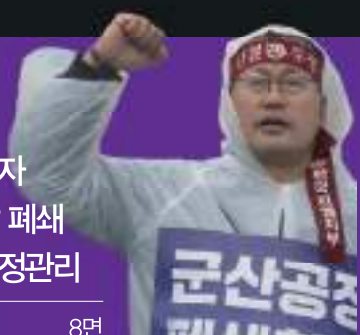


남·북/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진보·좌파의 대응

2, 3면

구조조정과 노동자
- 한국지엠 공장 폐쇄
- 중형조선소 법정관리

8면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4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미흡한 처우개선,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들 반발

4면

미투 운동과
'친노' 권력자들의
진영 논리

6면

한국의 난민들

3면

군부 핵심의 쫓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
주의의 실체

7면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김영익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더군다나 지난해 수시로 서로 전쟁 위협을 가했던 두 사람(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결정했다니 말이다.

지난해 내내 트럼프는 대북 대화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8월에 “미국은 북한과 25년 동안 대화해 왔다. [그러나] 대화는 답이 아니다” 하고 말했고, (최근 그가 경질한) 국무장관 킬러슨이 대북 협상을 추진하자 “[협상은] 시간 낭비”라고 일축했었다.

극적인 변화 때문에,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 듯하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과 미국, 한국 등이 공식 외교 협상 한 번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 보니, 사람들은 지금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 와중에 우익은 정상회담 자체를 마뜩잖아 하며 헐뜯기 바쁘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의 평화 염원 정서와 확실히 괴리돼 있다.

평화 정착을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바람에 공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해빙 무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또, 정상회담이 항구적 평화 정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다.

온건 진보진영에서는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낸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을 칭찬하는 얘기가 무성하다. 그러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연동될 수밖에 없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회담 계획들이 발표되자마자 중국·일본·러시아가 모두 주판알을 재빨리 튕기면서 협상 과정에 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움직임만 봐도 한반도가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대국들의 갈등과 경쟁이 낳은 불안정은 한반도 정세가 긴장에서 일시적 해빙으로, 다시 긴장으로 회복 바뀌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2000년의 경험

과거 경험을 돌아봐야 한다.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전후의 경험을 봐야 한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1998~1999년의 긴장이 일시 이완되면서 성사될 수 있었다.

1990년대 중엽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2대 세습이 안정화되는 듯하자 1998년에는 협약한 긴장 국면이 재개됐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 패권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북핵 의혹을 다시 거론하며 북한을 다시 압박했다.

이 긴장은 1999년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은 일본이 미국 MD에 참여한 주



남북 관계는 주변 강대국들의 관계에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된 명분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불안했던 미·일 동맹을 다잡으며 동아시아 패권 문제에서 한시름 놓게 됐고, 이를 배경으로 북·미 간에 긴장이 풀렸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능했다. 그 뒤 북·미 간 특사가 교환되고 북·미 정상회담 제안이 오갔다.

그러나 미국이 미·일 동맹을 다지고 패권을 재확인한 것은 결국 중국·러시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2002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한반도의 해빙 국면은 끝나버렸다.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실시됐으므로 당시와 다를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동아시아 상황은 2000년보다 훨씬 더 악화돼 있다.

서로 공공연히 ‘경쟁자’, ‘적’이라고 부르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핵무기 경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적 경쟁이 줄곧 점증해 왔다. 올해 2월 미국은 새 핵태세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최강의 핵 능력을 확보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무역전쟁” 얘기도 나온다.

각자 자국이 핵무기와 첨단 무기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것을 지지하며 서로 우위를 확보하려고 골몰하는 각국 외교관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런 국가들의 관여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될 기회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판문점

이번에 해빙이 찾아온 것도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과 관계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미 대화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을 확인하고 그 개발 속도를 늦춰 시간을 벌 수 있다. 오바마 정부 내내 북핵 협상이 거의 정지돼, 미국은 북한 핵시설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폭격하고 싶어도 어디를 폭격해야 할지 모른다. 시리아를 중심으로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중동 정세도 미국의 군사력 집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트럼프는 국내 정치에서 각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는 김정

은과의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벤트로 정치적 이득을 일거에 얻으려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 정부 안팎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미국의 권력자들은 북한 ‘위협’론을 고리로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해 오던 틀이 자칫 흔들릴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도 이 틀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판문점이든 어디든 5월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나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을 큰 틀에서 합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될 것이다.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북한) 비핵화의 과정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지부터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합의에 이르더라도, 대북 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반대급부를 미국이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미국은 번번이 이 약속을 뒤집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켜 왔다.

북·미 협상은 위기와 해소가 갈파드는 불안정한 과정일 것이다. 특히, 미국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의 경쟁 속에서 자국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협상 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 남북 관계도 이 과정에 연동될 수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제안 등이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제국주의 간 경쟁이 점증하고 엄청난 군사력과 군비 경쟁이 지속되는 한 종전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생각이 없다. 비록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협력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 사드 배치를 용인한 데 이어 올해 국방부는 처음으로 미국의 MD 해상훈련인 남플타이탄 훈련 참가를 공식화했다.

또한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나섰다. 이미 한국은 매년 지속적으로 군비를 늘려 육중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국가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방비 증가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런 점들은 모두 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북한을 자극할 테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런 데서 양보할 것 같지 않다.

동아시아 강대국 간 갈등과 현 대화 국면 사이에 명백히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이 문제를 북한과 미국의 동맹 체결로 풀자는 발상마저 나온다. “이익이 되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원산이나 흥남항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김연철 인제대 교수, 3월 12일 〈한겨레〉 칼럼), “북·미 군사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보장을 가장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다.”(이근 서울대 교수, 3월 9일 〈경향신문〉 칼럼)

실현되기 쉽지 않은 구상임은 제쳐놓겠다. 설사 미국이 북한을 포용하고 심지어 군사 협력 관계를 맺더라도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아닐 것이다. 그런 협력은 결국 중국을 겨냥하는 것일 테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제국주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이고,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경쟁 체제이다. 자본주의 지배자들 간의 협상과 타협으로는 제국주의가 낳는 불안정이 항구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적해 온 이 통찰은 지금도 유의미하고 적절하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가능케 한 화해 무드는 2년 만에 끝나 버렸다

오늘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논쟁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많은 진보·좌파들도 (각자 이유는 다소 다르지만) 회담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그런 기대감은 흔히 평화 운동의 구실이 “남·북·미 당국이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뒷받침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기층 운동이 협상 당사국들에게 “합의를 확고하고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아예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적극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동상이몽일 수밖에 없다. 협상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에 충실하고자 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정상회담이 결정됐음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군축 같은 조처는 입에 담지도 않고 있다. 미국과의 공조를 위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남북 화해를 바라는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에서 주요 훈련과 미국의 전략 무기 전개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층 운동이 당국 간 대화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외교 협상을 응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가들이 미국의 패권 정책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 문제에 항의하는 데 나서도록 고무하기 어려울 것이다.

쌍중단

진보진영이 더 나아가 아예 문재인 정부와 협치를 하게 된다면, 자칫 국회에서 군비 증강과 한·미 공조 강화 계획이 반영된 정부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

노동자 운동과 평화 운동의 활동가들이 정부 당국 간 대화에 환상을 품는 것은 한반도 불안정 문제를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푼 뿔이 내어 다루는 것과도 관련 있다.

이런 문제는 평화 운동 내에서 특정 요구나 슬로건으로 드러날 때가 종종 있다. 많은 기층 운동 세력들이 남·북, 미국, 일본 같은 당사국들에게 적대적 군사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중국에게는 군사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의 한 축이 중국인데도 말이다.



이것이 이른바 ‘쌍중단’류 요구의 맹점 하나다. 이는 한반도 불안정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간 갈등의 한 복판에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

군사주의를 자본주의에서 따로 떼어내어 다루고 세계자본주의 내의 불균등 발전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북한 핵무기 대 미국 핵무기의 대립을 비슷한 수준의 대립인 듯 본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는 미국의 핵무기에 견줄 만한 것이 못 된다.

또한 “남한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군사행동을 단행한다면 한반도에서의 비극은 이를 도발한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을 지지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가 미국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데서 효과적이지 않은 수단임도 분명하다.

제국주의를 아는 사람들은 북핵 문제를 30년 가까이 지속된 미국과 그 동맹국들(남한 포함)의 군사적 압박이라는 맥락 속에서 본다.

이 점에서 ‘누구든 군사행동을 하는 쪽이 책임 있다’는 주장은 문제적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약속 불이행이나 협박에 반발해 먼저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북한이 긴장 고조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가?

제국주의로 말미암은 지정학적 분쟁에서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잘못된 출발점이다. 이런 접근법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범이 제국주의 강대국임을 흐리게 만들어 기층 운동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 제국주의와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에 항의하는 독립적인 한반도 평화 운동의 기초를 닦는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세력인 노동계급의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 건설을 지향해야 한다.

김영익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임준형

5년 동안 전 세계 난민 숫자가 급격히 늘어 왔다. 2016년 전 세계 난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치였다. 그중 시리아 난민이 120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유엔난민기구의 2017년 6월 ‘연간 동향 보고서’). 지정학적 갈등과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체제가 난민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임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연간 난민 신청자가 2011년 1000명을 처음 넘어선 이래 매년 급증해, 지난해에는 약 9900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난민 신청자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난민법을 시행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지만 난민들의 열악한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은 인색하기 짝이 없다. 2017년 한 해 동안 난민 인정률은 2퍼센트에 불과했다. 역대 최저였던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난민 인정률은 거의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법무부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에서 이겨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족 결합), 다른 나라에서 이미 난민 지위를 획득한 후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재정착한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에 단 0.84퍼센트(51명)만이 법무부 단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 심사는 매우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6년 난민 신청자가 약 7500명이었는데 전국의 난민 심사 담당자는 32명뿐이었다. 2016년에 집행된 난민 심사 면담 통역 수수료로 간접적으로 계산하면, 신청자 한 사람당 면담 시간이 고작 1.7시간에 불과하다.

또한 난민 인정 심사는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임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박해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짓 서류를 이용해 탈출하거나 증거를 챙기기 힘든 난민들에게 높다란 장벽을 치는 것이다. 성소수자 난민은 심사 과정에서 성관계 횡수와 상대, 체위 묘사 등 부적절한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박해 위협으로 본국에서 성정체성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2017).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인정 불허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장기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거나 강제송환의 위협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강제송환은 난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조치



2015년 1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시리아 난민 가족

다. 다음 증언은 이런 난민의 고통을 잘 보여 준다.

“[난민 인정 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통지서를 받으러 간 나는 통지서를 받고 사무실 문을 나서자마자 이민특수조사대에 체포돼 조사받은 후 본국으로의 송환을 앞둔 신세가 됐다. … ‘본국에서 당신을 보내라고 했다’는 설명에 나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난민 신청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함께 갔던 친구가 … [난민 지원단체] 난센에 연락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무도 모르는 중에 박해의 위협이 있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졌을 것이다. 나는 난센의 개입으로 강제송환은 면했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라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유로 6개월 넘게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난민인권센터의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강연 자료집)

취업 금지

난민 지원도 매우 열악하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체류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막겠다며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취업이 금지된 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6년에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 신청자는 전체의 8.6퍼센트뿐이었다. 그마저도 지급 기간은 평균 3개월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경주에서는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가 미등록 신분으로 일하다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난민 신청 후 6개월 간 취업 금지 규정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취업 자격 없이 일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문제될까 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자체를 두려워했고, 결국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해 미등록이 됐던 것이다.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직장가입자로는 가능하지만 영세한 곳에서 일하는 경우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출산 예정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기가 나올 기미가 안 보여 …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어요. … 양수

가 더러워져 아기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어요. 당시 아이를 빨리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유도분만 주사를 맞는 거였는데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 주사를 맞지 않고 배가 아파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당시에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지만 출산 비용과 입원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너무 막막했어요.”(난민 지원단체 ‘피난처’의 ‘국내 인도적체류 허가 난민의 실태조사 보고서’, 2015)

한편, 정부는 시리아인들의 난민 신청이 증가하자 대부분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연도별 난민 인정자보다 인도적 체류 허가가 많은데, 누적 인도적 체류자의 75.9퍼센트가 시리아 국적자이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 활동 허가 외에 아무런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도 없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한다. 현재 전 세계 난민 중 가장 비중이 큰 시리아 난민이 정작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난민법이나 난민협약의 한계를 보여 준다.

정부는 3월 6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시행 기간이 문재인 집권 기간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난민이 겪는 고통의 핵심 원인인 극도로 낮은 난민 인정률을 올리겠다는 계획은 없다. 초안에 있던 인도적 체류자 의료보험 가입도 확정된 안에서는 빠졌다.

문재인은 대선 때 비호신청자(난민)가 자의적 구금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구금기간 상한 설정은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귀화를 더 어렵게 법률을 개악한 것 등은 난민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을 이렇게 막 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난민 인정을 대폭 확대하고, 난민(과 난민 신청자)에 대한 복지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

wspaper.org

★ 이명박 검찰 소환
노동계급에게 벌인 악행들도 단죄해야 한다

★ 정의당-민평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공무원노조
문재인 정부의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요구 단호히 거부하자

※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잔혹증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악 시도가 좌절되자, 국회는 3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 3월 20일에는 환노위 전원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 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액수 외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아 생계비도 안 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였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폭으로(16.4퍼센트) 인상됐었지만 노동자들의 삶이 크게 나아진 것도 아니다. 최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임금 총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1퍼센트(월 6000억 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 552만 명이 월 평균 10만 8천 원을 더 받게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따져봐도 한참 더 올라야 마땅한 액수다.

10만 8천 원

그런데 사용자들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16.4퍼센트)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저주를 퍼부었다. 지난해 말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밀어붙이며 실제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 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사용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슬금슬금 후퇴하자 더욱 기세등등하게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어수봉은 이미 지난해 10월 말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의사를 밝혔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유사한 입장을 밝히었다. 여당 소속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홍영표도 “최소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1월 11일 임금 인상 무력화와 인원 감축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결의대회

고 주장해 왔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2월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산입범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도 “제반사항을 검토해 신중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후퇴 의사를 내비쳤다.

최저임금위 회의가 종료된 직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로부터 넘겨 받은 전문가 TF 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문가 TF는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던 임금을 매달 분할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렇게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별도로 받은 임금 항목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인상 효과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논의에서는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거나,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도 정점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으로 지지율이 오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하는 듯하다. 예정대로 20일에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노동시간 단축 공약 후퇴에 이어 불과 한 달 사이에 자신의

핵심 노동 공약 두 개를 모두 누더기로 만드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에서 법안이 다뤄지는 3월 15일부터 국회 앞,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당, 환노위원 지역구 사무실 앞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3월 16일, 19~20일에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결의대회’를 연다.

누더기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무력화 강행을 다짐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강공으로 맞서는 모양새는 아니다. 애초 김명환 집행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이 일방적으로 개악될 경우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하겠다고 했었다.

노동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이나 최저임금 무력화는 주로 더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 점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조합이 되겠다는 민주노총은 이 쟁점에 관한 문재인인의 공약 후퇴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들은 ‘민주노총 요구안 마련을 위해 필요시 중집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이에 대해 후퇴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인지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우니 일부(고정상여금 등)를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상대적으로 소수 일지라도 이는 모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조건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의 애초 취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지금은 수년간 빈곤과 불평등의 증대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 시도 저지를 위해 단호하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현대모비스 울산지회 출범

“우리가 뭉치면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3월 11일 뜻깊게도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총회를 열었다(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모비스 울산지회). 노동자들은 우렁찬 함성과 함께 노조 설립을 선포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단결하면 패배하지 않는다!”

지난해 현대모비스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처음 설립한 뒤 여러 지역의 공장들에서 잇달아 노조가 설립됐다. 이번 울산공장 노조 설립은 화성, 아산, 광주, 병택에 이어 다섯 번째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에 모들과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이자 다른 부품사들을 관리하는 핵심 기업이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실시식으로 모들을 공급하는 직서열 방식으로 현대기아차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큰 힘을 갖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대모비스 화성공장 조합원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2시간 총회를 하자 인근에 있는 기아차 화성공장 생산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고 한다.

이날 울산 총회에는 노조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 동진오토텍 등 여러 노조의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노조

를 먼저 설립한 화성, 평택, 광주의 현대모비스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그리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연대 회원들도 참가했다.

강수열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이창규 민주노총 울산본부 사무처장, 그리고 하부영 현대차지부장 이 노조 설립을 축하하는 연설을 했다.

희망

총회에서 선출된 함형길 지회장은 감히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최소한의 권리로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동지들의 열정과 열망을 잊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단결합시다. 동지들이 바라는 고용 안정, 현장 인력 충원, 노동강도 해소를 투쟁해서 쟁취합시다.”

현대모비스 화성지회 활동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노조 설립 전에는 연차를 쉴 수 없었습니다. 관리자 눈에 잘못 보이면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일이 없어도 억지로 청소하며 닦은 데를 또 닦아야 했습니다. 아예가 박근혜 때면 1주년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도 뭉쳐서 싸우니까 내려와야 했습니다. 우리도 뭉치면 현장을 바꿀 수 있습

니다.”

총회가 끝난 후 이어진 뒤풀이에서는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결의를 다졌다. 총회에서 미처 발언하지 못했던 여러 연대 단체 활동가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모비스 노동자들은 이런 연대에 크게 힘을 받았다. 조합원들은 “연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고용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조합원을 중에도 계약직은 1년도 안 돼 잘려요. 저도 일한 지 7개월이 됐는데, 업체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노조와 함께 싸울 겁니다.”

“작업 공정 이동이 너무 잦습니다. 그러니 노동강도가 세죠. 하루 정해진 물량을 끝내도 일을 더 하라고 시킵니다.”

한 노동자는 과제를 말했다. “아직 노조가 없는(울산 2개 공장 중 하나인) 염포동 공장으로 조직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대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한껏 사용한다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비정규직 공장으로 알려진 현대모비스에서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다른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고 있다.



3월 11일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노동자들이 노조 창립 총회를 열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암호화폐 환상 걷어 내기

김종현

지난해 말 암호화폐 붐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자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나 1월 30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이후로 별다른 조치가 도입되지는 않았다.

물론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의 충격으로 암호화폐 가격은 급락했고, ‘김치프리미엄’(국제 암호화폐 시세와 한국 시세 사이의 차액)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몇몇 거래소에서는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 견줘 일일 거래량이 거의 10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다시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줄지 않고 3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급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 다수가 여전히 시세 상승을 기대하며 매도하지 않고 버티고 있고, 실명제 도입은 번거로움을 관란하는 주체가 반드시 필요할 신규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태도는 훨씬 대놓고 암호화폐 거래에 우호적이 됐다. 최홍선 금융감독원장은 2월 20일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이든 통화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면 좋은 자산이다”라며 “우리(금융원)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풍이 다소 잠잠해지니 투기적 거래 행위를 눈감아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거품

물론 암호화폐 거품이 자본주의 경제를 위협에 빠뜨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닷컴 호황 등 금융 위기를 발생시킨 거품에는 수조 달러에 이르는 돈이 얹여 있고 했지만, 암호화폐 거품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이 묶여 있었다. 올해 1월 15일 코인마켓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암호화폐 1438종의 시가총액은 7060억 868만 3921달러였고, 3월 14일에는 1558종의 시가총액이 3677억 4376만 149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암호화폐에 투자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빚을 져서 조달된 경우라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가총액이 워낙 적은 상황이다. 또한, 거품과 투기 광풍이 한 나라에 몰려 있지 않고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데 수천억 달러 수준이라면 거대한 금융 위기를 몰고 올 상황은 아닌 듯하다. 더군다나 시세가 반토막이 나는 동안에도 폭발적인 상황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보는 것은 그러면 실재적 수익에 대한 청구권 구실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오로지 시세 차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요컨대 거의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투기성이 짙은 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투기 행위를 불법투기 위해서 엄정하게 많은 사회적 자원이 낭비된다. 비트코인 채굴을 장비에 전기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그 빙산의 일각이다.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는 비트코인 채굴기를 돌리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애당초 불복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불복체인의 데이터 저장이나 보안 역량 등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과장된 면이 크다. 탈집중화와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져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할 때는 활용하지 못하는 등 기술적 한계도 많다고 한다.

불복체인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현황으로 보건대 (말만 요란할 뿐) 투기와 사회적 자원 낭비를 생해할 정도로 대단한 기술 진보도 아닌 듯하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는 최대한 규제되는 것이 낫다. 거래소 폐쇄 등 국가가 나서서 수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이 필요하다.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P2P 거래나 해외 거래소 이용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난점은 있지만 말이다.

로)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통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탈집중화된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암호화된 거래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직접 보낼 수 있으므로, 거래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화폐 체계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한, 화폐 체계는 불안정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탈집중화된 경제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없는 화폐를 쓰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자본주의는 물물교환 경제가 아니라 화폐적 생산체제인만큼, 모든 상품의 거래는 화폐가 매개한다. 따라서 경제 전반에서 화폐를 필요로 하는 만큼 원활히 화폐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화폐를 매개로 하는 거래가 난항을 겪지 않도록 화폐의 값어치를 관리하는 주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그 값어치가 들쭉날쭉해서 거래에 쓰이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국가, 특히 중앙은행이 그런 구실을 한다. 만약 국가가 국가가 이처럼 화폐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가치의 생산·유통 더 나아가 자본의 축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

게다가 현실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시세 변동 때문에 거래의 어려움 등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들은 암호화폐의 ‘효용성’을 깎아먹고도 남는다. 따라서 대안 화폐로서의 효용성은 전혀 합적점을 줄 수 없다.

한편 ‘탈집중화된 경제’에 대해 말하자면 비트코인 광풍 속에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자산소유자들이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거금을 들여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해서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암호화폐 세계에서 부를 창출할 수단과 시장 권력을 이미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몰릴 수밖에 없다.

신기술 육성?

혹자는 신기술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데이터를 본산 저장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구현하려면 암호화폐 거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애당초 불복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불복체인의 데이터 저장이나 보안 역량 등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과장된 면이 크다. 탈집중화와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져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할 때는 활용하지 못하는 등 기술적 한계도 많다고 한다.

불복체인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현황으로 보건대 (말만 요란할 뿐) 투기와 사회적 자원 낭비를 생해할 정도로 대단한 기술 진보도 아닌 듯하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는 최대한 규제되는 것이 낫다. 거래소 폐쇄 등 국가가 나서서 수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이 필요하다.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P2P 거래나 해외 거래소 이용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난점은 있지만 말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대안 화폐’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암호화폐는(컴퓨터를 통해 민간에서 ‘채굴’하는 것이으

신정환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2017년 12월 31일 서울교통공사 노(정규직 노조 집행부)·사 합의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3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됐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이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전환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의 방침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당시 노사 합의 내용과 최근 실무합의 내용을 보면,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못 된다.

첫째, 모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기존 정규직 직급 체계로 온전히 편입하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경력 3년 미만인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최하 직급(7급) 아래 새로운 직급인 7급보를 부여받았다. 정규직 전환 인원 1285명 중 약 79퍼센트의 인원(1012명)이 이에 해당하는다. 2020년 10월 1일이 돼야 7급 부여가 완료된다.

둘째, 그렇다 보니 기존 무기계약직의 73퍼센트(942명으로 7급보의 대다수는)는 기본급이 정규직 최하 임금(7급

미미한 처우 개선, 노동강도는 강화

1호봉으로 약 173만 원)보다 낮다. 이 노동자들은 단계를 거쳐 무기계약직 경력 3년이 넘어야 7급 1호봉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셋째, 기존 경력은 물론, 사급에 있는 사회 경력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정규직 남성 신규 입사자들은 군 경력 등을 인정받아 7급 3호봉부터 시작하는 데 말이다.

온전한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데는 서울시와 공사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사

측은 올해 전환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약 4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차별과 저임금을 받으며 굶은 일을 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다.

지난해 말 합의 직후, 당사자들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합의 내용에 대해 기존 정규직 입사들과 ‘또 다른 차별’을 두는 것이며, “정규직 전환은 알맹이(제대로 된 처우 개선)는 빠진 채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판했다.

비용 최소화

이러한 서울시와 사측의 비용 최소화 방침은 3월 1일 정규직 전환 이후

차량기지 내 식당 조리원 노동자들은 3월 1일자로 정규직이 됐다. 그런데 사측은 이에 맞춰 조리원 노동자들의 근무형태를 개악했다. 이에 조리원 노동자들은 3월 13일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동안 조리원들은 식사 인원 대비 조리 인력이 부족해 주 6일 근무를 해

왔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 5일제를 위해 기차비 [조리] 인원 충원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사측은 3월 12일부터 인력 충원 없이 주 6일 근무를 주 5일(주중 4일, 주말 1일)로 줄였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은 줄지만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휴일근무수당은 못 받게 돼 임금에서도 손해를 본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개악에 대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을 초과근무를 없

에 상쇄시키려는 속셈이다”라고 꼬집었다.

노동자들은 “(지급도) 손목이 아프고 인대가 나가고 어깨가 쑸시 [눈데]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여든 인원 뭇을 노동자들더러 짊어지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유일한 해결책은 인력 충원”이라며 당장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한다.

이러한 근무형태 개악을 서울시 하청노조 집행부가 합의해 준 것은 매우 유감이다. 조리원들은 서

울지하철노조도 조합원이기도 하다. 당사자들에게 사전 설명조차 없이 노동자들의 의견에 반하여 개악안에 합의한 것은 민주노조 집행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울시와 사측은 정규직 전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무형태 개악을 당장 철회하고, 부족한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신정환

미투와 정치 공작?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김문성

미투 운동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로 번지자 논란이 커졌다.

발단은 친노 방송인 김어준이 2월 말 ‘미투 운동은 지지하지만 젠더 문제가 복잡해 분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 뒤 얼마 안 돼 유명 친노 정치인들을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투 폭로 대상이 됐다.

현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현직 광역단체장(충남도지사) 안희정이 보좌관 성폭행 의혹 폭로 다음날 직위를 사퇴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민주당 중진 의원 민병두도 7년 전 노래방에서의 신체 접촉 관련 익명 폭로가 나오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이자 ‘나꼼수’ 방송으로 유명한 정봉주도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익명의 폭로에 부딪혔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지속 보도한 〈프레시안〉의 기자들을 고소했다.(피해호소인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성추행 당일 행적에 관한 진술들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서 법정에서야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 같다.

성 문제를 이용한 흑색 선전이나 음해 등 정치 공작이 없었던 일은 아니므로, 미투 운동을 이용한 허위사실 폭로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여성들이라고 해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어준의 주장은 (친문 진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앞으로 미투 운동을 친노 vs. 비친노의 진영 논리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3월 12일 전직 노무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조기숙이 좋은 미투와 사이비 미투를 구분하고 나선 것도 같은 취지일 것이다.

조기숙의 프레임대로라면,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노동자들이 저항한 것을 두고 친노·친문 인사들이 노동운동과 좌파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망하고 그 결과로 이명박근혜 정부가 등장했다고 호도해 온 것이 떠오른다.

미투를 음해하는 각종 음모론은 대부분 검증하기 어렵고 우연히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인과관계로 엮는 식이다.

분열?

그러나 미투는 압도적으로 음모가 아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친노 정치인들이 여성들이 겪는 성적 차별·괴롭힘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스스로 가해자 짓을 한 것이 그들을 믿었던 지지자들을 분노케하고 서로 분열시킨 것이다.

가령 안희정은 피해호소 여성이 검찰에서 조사받는 시간에, 소환되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았다고 검찰을 찾아갔다. 권력형 성폭력(성적 갑질)인 사건의 성격상 안희정의 행동은 피해



차별 반대 운동은 노동계급의 대중운동과 만나야 한다

호소 여성을 압박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위력이나 위계의 존재를 부인하며 뻔뻔스럽게도 이제 ‘피해호소 여성보다 자신의 부인이 더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보수 우파의 방어를 바라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 폭로 직전까지도 미투를 지지하고 충남인권조례의 폐기를 막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한 사람의 실체가 이토록 위선적이라니.

이런 안희정과 그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체 돼야 할 일일까? 무책임하게도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만을 생각하고 그를 제명해 버려, 진상 조사 후 징계를 내리는 책임은 피해 가고 있다.

설사 진실이 정봉주 편에 있는 것으로 판명될지라도 정봉주 본인을 포함한 나꼼수 멤버들도 ‘비키니 발언’ 등 여성 비하 인사를 가끔 해 왔던 점을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수십만 명의 지지를 받는 그들이 마초 느낌 물씬한 대화를 방송에 내보낸 것은 무책임한 처사였다.

미투 운동은 더는 눈치 보거나 피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선언이다. 극소수 예외가 허위사실을 폭로한 것일지라도 전체적인 미투 운동에 진영논리를 들이대고 감별사 노릇을 하려는 것은 여성들에게 다시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당한 압박이다.

물론 사실관계를 다루는 경우에 개인들끼리의 모호한 감정이 수반된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피해호소인을 존중하면서 사안의 경중과 정황 등 각종 증거들을 잘 따져 가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주관주의적 “피해자 중심주의”나 과잉 확장된 성폭력 개념, 무분별한 공개 폭로 방식, “2차가해” 논란 등의 문제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면 이 경험들을 균형있게 평가해야 한다.

보수 진영

역겹게도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미투 운동이 나를 겨냥한 줄 알았더니, 민주당과 좌파들만 걸리고 있다’고 했다. 진영 논리로는 이런 궤변을 반박하기 어렵다.

공개 폭로 후에 자신을 응원해 줄 주변 환경이 없는 보수 진영 피해자들은 나서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보수 권력자는 대개 더 큰 권력을 가졌으며 보복도 확실해, 설령 수사를 해도 별 바뀔 게 없다는 생각도 한몫할 것이다.

이 사회의 최고 기득권층을 대상으로 한 공개 폭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장자연 리스트나 이진희 성매매 영상, 2013년 박근혜의 법무차관 김학의의 고위층 성접대 파티 등에 대한 폭로가 있었다. 하지만, 수사조차 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 무혐의로 모두 묵살됐다.

이런 상황은 미투 운동의 방식, 즉 개인의 용기로 뒷받침되는 운동이 반드시 만나게 될 계급 사회의 벽을 보여준다. 계급 구조의 상층일수록 저항이 거세다. 개인의 용기 있는 폭로와 응원만으로 이런 저항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나도 고발한다”는 공개 발언 운동이라는 특성상 미투 운동은 또한 불가피하게 언론 의존성이 크다. 그러므로 발원자나 폭로 대상이 유명인이라거나 하는 자극적 요소가 부족하면 힘을 받기 쉽지 않다.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건 단지 우연은 아닌 듯하다.

가령 언론이 유명인 안희정과 정봉주 등 유명인들의 의혹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사이에 서울의 모 여중학교에서 8년 전 일어난 교사의 지속적 성추행을 폭로한 일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보도됐다. 피해 여성은 부모가 알게 되는 게 너무 미안하다며 8년을 가슴앓이 했는데도 말이다.

이런 점에서도 평범한 개인들의 용기에만 맡겨 놓으면 운동의 지속이나 목표 달성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윤택이나 안희정처럼 당장은 사과해 비난의 해일은 피해 놓고는 언론이 덜 주목하는 법적 다툼에서는 위력이나 위계가 없었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피해자 개인이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

집단적 투쟁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 노동단체 같은 상시적 조직이 버팀목이 될 수 있다. 2000년 롯데호텔 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남녀 노동자들이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요구하며 집단 항의운동을 벌였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힘을 갖춘 운동의 뒷받침을 받는 개인이어야 더 자신 있게 “No”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계급 운동으로 계급 세력 균형이 바뀌고, 노동계급 운동의 보호를 받으면서 더 많은 개인들이 이런 태도들을 보이면 새로운 관행들이 생겨나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래야 기득권층 안에서도 전과 다른 태도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미투 운동도 어찌 보면 촛불 운동 여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남성이 성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고, 성차별적 편견이 남아 있다고 해서 모두 그런 범죄 행위나 비행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 노동계급은 여성을 적대하고 차별해서 궁극적으로 얻을 게 없다. 남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대중운동 속에서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구조적으로 차별받는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하나의 단일체인 것은 아니다. 남성을 적대시 하면서 모든 여성이 단일한 것처럼 가정하다가 한두 명의 허위 폭로만 밝혀져도 모든 여성이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편견이 힘을 얻는 것에 맞서기가 힘들어진다.

보통의 남녀가 단결하려면 남성 노동자들 일부의 태도 변화도 동반돼야 하는데, 그런 변화를 촉구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 노동단체처럼 조직된 운동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남녀가 단결한 집단 행동은, 개인의 의식 개혁이나 입법 캠페인으로 이를 수 없는 변화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요컨대, 지금 미투 운동이 악용되거나 과격해서 문제인 건 아니다. 미투 운동은 더 근원적이고 정치적이며 집단적이어야 한다. 미투 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저항하는 집단적 투쟁과 연관을 맺어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파업대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김문성

박근혜 정부 시절, 군부 핵심이 정권 퇴진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군대 투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집회로 인한 ‘소요 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을 논의한 일이 국방부 내에 있었다고 폭로했다.

국회 탄핵소추 가결 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등이 논의를 주도했는데, 현재가 탄핵을 기각해서 시위가 격화되면 위수령을 발동하고 특전사 등 진압 가능 부대가 나서는 안을 모의했다는 것이다.(위수령은 일부 지역의 치안을 군대가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유신 직전과 1979년 부마항쟁 때 박정희가 위수령을 선포했다.)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군부 내 핵심이 퇴진 촛불을 무력으로 진압할 논의를 한 것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맞선 박근혜의 친위 쿠데타였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아래서도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얼마든지 “민주주의”, “문민 통치” 같은 기존 통치 질서와 공언을 뒤집고 유혈 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100년이 넘는 영국에서도 1970년대 초에 북아일랜드 사태 진압을 위한 군부 쿠데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그리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1973년 칠레에서는 미국의 후원을 등에 업은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좌파 정부를 뒤엎고 좌파와 노조원들에게 유혈낭자한 복수극을 펼쳤다. 그 때까지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나라 중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가장 오래 정착된 극소수 나라에 속했다.

한국 노태우 정부의 군부 내에서 쿠데타를 검토했음이 폭로된 바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도 지배 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지배가 위협해졌다 싶으면 계급 독재로서의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다.

도박

그렇다면,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에 군부 쿠데타나 군대의 무력 진압이 없었던 것은 운이 좋았던 일일까? 실제로 당시에 민주당 대표 추미애가 계엄령 소문이 있다고 했다.

당시 계엄령 검토 의혹 제기는 화제가 됐지만,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계엄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정권 퇴진 여론과 촛불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저들이 두려워 한 것 폭발적 기세의 퇴진 운동은 군부의 반동 시도를 접게 한 결정적 배경이었을 것이다

정치 상황상 국회가 계엄령에 찬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때문에 박근혜가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전격적인 유혈 쿠데타를 각오한다는 것인데, 운동의 기세 때문에 이런 도박은 성공할 가망이 거의 없었다.(그래서 위수령을 검토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그런 쿠데타 시도는 5·16이 아니라 혁명에 의한 카운터 펀치를 부를 가능성이 더 컸다. 당시 대중의 기세가 너무 커서 검찰, 법원, 국회 모두 운동에 양보했다. 게다가 그 시기에는 노동계급의 투쟁성이 (활화되지는 않았어도) 잠재해 있었다.

모두가 경멸하는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에 대중은 격분했을 것이고, 사병들도 동원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순식간에 혁명적 상황이 조성됐을 것이고, 당황한 지배계급 내 일부가 박근혜를 비합법적으로 자리에서 제거해 버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대중의 분노와 사기는 오히려 올랐을 것이고, 대중의 격렬한 저항 태세가 결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런 저항의 최종 성패는 결정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지배계급은 이미 정치적 실패가 명백한 박근혜 정부를 지키려고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했을 것 같지 않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런 답 말고는 잘 나오지 않으니, 청와대나 군부에서도 소수가 고려만 하고 실행에 옮길 생각은 포기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절차를 통해 박근혜를 퇴진시킨 것이 결과적으로는 혁명으로 발전할 작은 가능성을 억제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방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분석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도 혁명이 단지 점진적으로 다가올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적 가능성(현실성, 실재성)을 지닌 사건이라는 점도 보여 준다.

혁명은 점진적 과정인가

1934년 봄 프랑스에서 나치의 쿠데타가 공산당·사회당 공동 시위에 부딪혀 좌절되자 트로츠키는 프랑스 혁명의 서곡이 올렸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장기 침체 시기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상 상태를 준수하고 적응하려는 개혁주의는 전략적으로 부적절하다. 퇴진 촛불 때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운동이 국회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 절차로 수렴되게 하려고 애썼다. 국회 탄핵 후에는 집회도 멈추려 했다. 만일 국회 탄핵 이후 12월 중순에 퇴진 촛불을 멈췄다면, 일부 우익에게 오판할 기회를 줬을 지도 모를 일이다.

헝가리인 마르크스주의자 죄르지 루카치는 레닌주의 정치의 핵심은 “국제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사건 모두를 혁명의 현실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중의 자발성을 뒤따라가 오히려 혁명적 자발성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나머지 좌파들과 달리 레닌과 볼셰비키가 결정적 순간에 대중과 함께 혁명적 권력 장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다.

개혁주의자들의 소심함과 달리, 한국 지배자들 다수는 오히려 ‘혁명의 현실성’을 계산에 넣었고, 그래서 당시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심화·안정시키는 쪽으로 비교적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도 오판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다. 제국주의 시대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 격변의 시대이므로 누구든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8

7월 19일(목)~22일(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해외 연사 로라 마일스

영국의 트랜스 여성으로 노동조합 활동가이자 마르크스주의자다. 대학 강사 출신으로(현 67세) 대학노조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2015년까지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었는데, 영국 최초로 노동조합 전국집행위원으로 선출된 트랜스젠더였다. 또, 대학노조 내 사회주의자들과 좌파들로 이뤄진 ‘UCU좌파’의 사무국장을 지냈다.

맑시즘2018에서 연설할 주제

- ▶ 트랜스젠더와 마르크스주의
- ▶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 ▶ 심리학과 마르크스주의
- ▶ 신자유주의가 교육과 교육 노동자에게 끼친 해악과 그에 맞선 투쟁
- ▶ 노동현장에서 차별에 맞서 싸우기 (개막 집회 연설)

이 밖에도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좌파 저술가들 수십 명이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수십 개 알짜 주제로 맑시즘2018에서 발제합니다.

※ 발제자와 주제가 웹사이트(www.marxism.or.kr)에 업데이트됩니다.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www.marxism.or.kr

결국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킨 것은 ‘혁명의 현실성’이 주는 압력이었던 것이다



한국GM 공장 폐쇄, 중형 조선소 법정관리, 금호타이어 매각 정부의 책임 회피에 노동자 분노가 커지다

박설

3월 8일 한국GM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평생을 바쳐 온 직장 에서 '희망퇴직'으로 밀려난 비통함의 표현이었으리라.

피도 눈물도 없는 GM은 이런 노동자들을 아랑곳 않고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GM 사장 댄 암만은 최근 한국 정부와 노조에 "신속한 구조조정 합의"를 주문했다. 노조에는 군산 공장 폐쇄와 임금·조건 하락을, 정부에는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을 통한 감세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GM은 이탈 말 돌아오는 2조 원가량의 차입금 만기를 들먹이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빛의 대부분은 GM이 한국GM에 떠넘긴 것이다. 높은 이자율을 매기고 유럽과 러시아 철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적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노동자들더러 지라는 적반하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M에 책임을 물을 방안으로 제시된 재무 실사도 GM의 자료 제공 의무 약속조차 받아 내지 못한 채 시작했다. 특히, 정부는 군산 공장 폐쇄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다. 정부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최근 열린 한국GM, 중형 조선소,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집회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 회피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줬다

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럴 만한 재정적·정치적 능력도 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일자리 보호를 위해 GM 군산 공장을 국유(기업)화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의 이윤을 구할 것이냐, 노동자의 일자리를 구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결정적 시기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드러냈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대에 커다란 금이 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금호타이어를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 매각하기로 했고, 중형조선소도 법정관리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집회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3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중

형 조선소 구조조정 저지 집회에는 성동조선지회와 STX조선해양지회 노동자 1500여 명이 참가했다.

같은 날 광주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매각 반대 파업 집회에는 금호타이어 노동자 등 4000여 명이 참가했다.

3월 12일 열린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불만이 표출됐다. 심현선 금호타이어지회 사무장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촛불운동으로 당선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들을 지키겠다는 정부가 '먹튀' 해외 자본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수개월째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7만 금속노조의 힘으로 해외 매각을 저지합시다."

일부 대의원들은 금속노조가 구조조정 공격을 막기 위한 투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지부 소속 김정구 대의원은 말했다. "오늘 제출된 사업계획은 7~8월에 1차 상경 투쟁, 9월에 2차 상경투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사업장 동지들은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급히 파업투쟁을 해야 합니다."

STX엔진, 금호타이어 소속 대의원들도 사측과 채권단이 3월 말~4월 초까지 자구안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결정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지부 소속 신우환 대의원은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지부·지회별

로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때 금속노조는 어디에 있었나 하는 반성이 우리 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후회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아차지부 소속 김우용 대의원은 금속노조가 3월 23일 하루 파업을 하고 더 확대해 나가자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비록 부결됐지만, 392명 중 106명(27퍼센트)의 지지를 얻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총파업에 준하는 전국적 투쟁"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그것을 "선언하기보다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장 싸우기에는 "현장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란 현장의 단순한 풍향계가 아니어야 한다. 현장을 위한 투쟁 지도부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현장 공무니를 좇을 것이 아니라 현장을 (투쟁하는 쪽으로)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맹렬히 진행되는 공세 앞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기보다 흐트러뜨리는 효과를 낼 뿐이다. 그동안 '희망퇴직' 방지, 비정규직 해고 방지 등이 이미 그런 효과를 냈다. 금속노조가 추수주의와 소심함을 버리고 투쟁 계획을 제시한다면 현장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결집시킬 수 있다.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법정관리 철회하고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강동훈

3월 8일, 정부는 STX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한다고 해도 청산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선업 불황 지속 때문에 성동조선을 사들일 기업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산 가능성도 꽤 높은 듯하다.

정부는 STX조선이 정규직 노동자 1300여 명 중 40퍼센트(500여 명)를 해고한다는 '노사화약서'를 4월 9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협박했다. 정규직인 생산직 노동자를 700여 명에서 200명 정도로 줄이라는 얘기다. STX조선 노조에 따르면, 남아 있는 물량 16척을 건조하려면 생산직·사무직 노동자

3000명가량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 계획대로라면 '살아남은' STX조선도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2000여 명)이 비정규직인 조선소가 되는 것이다.

중소 조선소 노동자들은 그동안에도 해고, 임금 삭감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 왔다.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8000여 명에 이르던 STX조선 노동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 1300여 명으로 줄었다. 2010년에 9000여 명이었던 성동조선도 현재 남아 있는 노동자는 1200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중 1000명은 지난해부터 유급휴직 중이다.(안타깝게도 노조 지도부는 구조조정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그런데도,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조선업 일자리를 더욱 줄이고, 그나마 남은 일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 계획과 함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내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내놔던 계획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해까지 조선업에서 수만 명이 해고되는 동안 이 지원 계획으로 재취업한 사람은 고작 수백 명에 그친다.

산업적 고려

이번 구조조정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조선소들을 살리는(그래서 고용을 보호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문재인이 대선 때 중형 조선소들을 살리겠다고 공약한 데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는 향후 구조조정에서 '금융 논리의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 논리만 앞세워 여러 조선소와 한진해운을 파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박근혜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신호인 것처럼 보였다.

문재인은 올해 1월 3일 대우조선해

양을 방문해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올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해 조선업 지원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안 발표로 중형 조선소 노동자들의 기대감은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3월 8일 브리핑에서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은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이 무조건 자금을 지원해 살리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말한 "산업적 측면 고려"는 일자리 보호와는 상관없고, 조선업의 과잉설비를 더 줄여 대형 조선소 사측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주도한 조선업 구조조정(인력 감축, 임금 삭감 등)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제동도 걸지 않았던 점도 이를 보여 준다.

그러나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어 온 노동자

들이 또다시 고통을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고용 상황이 최악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 상황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조선소 노동자들을 해고할 게 아니라, 조선소 노동자들이 요구하듯이 "있는 일자리부터 지켜야" 한다.

한때 20곳에 이르렀던 중소 조선소 중 상당수가 파산·매각 등으로 사라지고, 지금 남아 있는 중형 조선소들은 모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소유하고 있거나 그들의 관리 하에 있다. 사실상 정부 소유인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중형 조선소들을 영구히 국유(기업)화 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그럴 의지가 없는 것일 뿐이다.

관건은 이런 기업을 파산·매각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국유화해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강제할 투쟁을 노동계급이 하는 것이다.